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98.01 (-3.68)	766.79 (-6.47)
금리 (연초 대비)	환율 (원·달러)
2.890 (-0.030)	1325.10 (-13.70)



가계부채 은행 탓?... 대출관리 실패한 당국, 뒷북 논란

당국 엄격한 대출 관리 주문에 5대 은행 2개월간 23차례 인상 이복현 원장 “원하던 바 아니야” 은행권 “가계부채 잡고 싶다면서 부동산 활성화 동시 추진은 모순”

가계대출 급증세로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요청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이란 방법으로 이익만 챙겼다고 되려 은행권을 비판하고 있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대출금리 인상을 진행해왔는데 이제야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KBS ‘일요일진다 라이브’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금리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금감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비난의 화살을 은행권을 돌린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17개 은행 가

계대출 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주문내용은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 목표인 연간 2~3% 범위에서 가계대출을 취급 ▲자산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 확대 자제 등이었다.

간담회 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속도조절 주문에 대출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번 달까지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을 7차례 진행했고, ▲KB국민은행 6차례 ▲우리은행 6차례 ▲하나은행 2차례 ▲NH농협은행 2차례 순이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총 23차례가 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간담회 당일에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영업경쟁 과정에서 대출을 줄이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늘리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며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달라”고 말했다.



한미 공군 연합 실사격 훈련

공군 F-35A 전투기가 26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무인공격기 역할을 하는 훈련용 표적을 향해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28일까지 ‘울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연습의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결국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은 금융당국이고, 결국 시장 왜곡 등 불분소리가 나오자 책임을 은행권에게 전가한 것이다.

은행권을 향한 이 금감원장의 공개 저격으로 시중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보면 당국은 대출 규모만 관리 주문한 것이고 금리를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다”가 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가계부채를 잡고 싶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같이 추

진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세자금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또 다시 은행권이 비난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승용 기자 isy2665@metroseoul.co.kr

직구 4배 늘었지만 역직구는 축소

해외 직구, 의류·패션 중심 증가
중 한한령 여파... 역직구는 꺾여

최근 10년 간 해외 직구 규모가 4.1배 늘어난 반면, 역직구는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꺾이는 부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6일 발간한 ‘2024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2014년 1조6000억원이었던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는 2023년 6조7000억원으로 4.1배 늘어났다.

반면 해외 역직구(직접판매)는 2014년 7000억원에서 6조원 규모까지 성장했으나, 2019년 성장세가 꺾이면서 2023년 1조7000억원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구시장은 의류·패션잡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쿠팡점프를 이뤘고, 역직구는 K뷰티 관련 품목 판매가

늘어나다 중국 한한령(限韓令)으로 꺾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은 “2021년까지 해도 아마존, 베스트바이 등 미국 쇼핑몰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직구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았다”며 “알리·테무 등 C커머스 플랫폼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내 진출이 본격화됐던 2023년부터는 중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구의 성장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중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전체 역직구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품목으로는 화장품이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가운데 2017년 한한령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관광뿐 아니라 화장품·식품·컨텐츠 구입을 제한하면서 중국 화장품 역직구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6명당 1명 알바... 韓 시간제근로자 증가 1위

5년간 시간제 근로자 수 급증
전체 임금근로자의 16% 달해
15~29세 청년층 증가폭 최고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자의 증가폭 비교에서 주요국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이른바 ‘알바’라 불리는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국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2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시간급을 받은 시간제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1%에 달했다. 지난 2018년(12.2%)과 비교해 3.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 8명당 1명이었던 알바 종사자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6명당 1명꼴로 커진 것

이다.

반면, 지난해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6.2%로 2018년(16.5%)보다 되레 줄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1.9%, 18.0%로, 5년 전(12.7%, 19.0%) 대비 0.8%p, 1.0%p 감소했다. 그리스는 같은 기간 10.4%에서 7.9%로 시간제의 비중이 무려 2.5%p 작아졌다.

코스타리카(-3.4%p)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콜롬비아(-2.5%p), 네덜란드(-2.1%p) 호주(-2.0%p), 영국(-1.8%p), 슬로바키아(-1.8%p), 스위스(-1.7%p), 슬로베니아(-1.4%p), 이탈리아(-1.3%p), 폴란드(-1.1%p), 포르투갈(-1.0%p) 등이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시간제 비중이 컸던 스웨덴은 13.5%에서 11.7%까지 감소했다.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도 각각 0.5%p, 0.3%p 내려갔다. OECD가 함께 제시

한 브라질(비회원국) 역시 15.7%에서 13.8%로, 우리나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인용해, 지난 2012~2022년 기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연평균 2.5%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폭인 1.4%를 크게 웃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미만 중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시간제 증가폭(22만7000명→29만명)이 컸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60.8%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시간제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일부 응급실 단축·파행운영 관리 가능... 9월1일부터 정상화”
▲ 강정애 보건장관 “광복회 행사 발언, 정치행위로 생각할 여지 있어” /사진 뉴스1

▲ 원안위원장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대로면 위험 없어” /사진 뉴스1
▲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르자... 인근 신고가 ‘속출’



▲ 김문수 “제주 4·3은 공산폭동... 국가사과는 양민 희생에 대한 것” /사진 뉴스1
▲ 국힘, 이재명 ‘독도 조사단’ 지시에 “과담 선동 대신 회복 전념하길”